

# 증권·보험 등 진입장벽 낮춰... '금융의 메기' 키운다

##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의미

전 금융권 특화 금융사 출현 가능  
업권 불문 자본금요건 일제히 낮춰  
은행업 진입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간 꿈쩍하지 않던 금융업 진입규제가 빗장을 풀었다. 그간 감독당국의 전유물이었던 금융업 진입정책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기로 했다.

한계는 아직 남아있다. 금융권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던 은행업 진입규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고, 적극 추가 인가 방침을 밝힌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현행법 하에서도 수요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2일 내놓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핵심은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업권에 특화 금융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처럼 업권마다 경쟁을 촉진할

<업권별 산업현황>

	은행	보험	증권	지문·일임
진입형태	인가	허가	인가	등록
업체수	19개	56개	55개	179개
총자산	2,739조원	1,110조원 (생보 883조원 손보 277조원)	390조원	7,245억원
당기순익	11.2조원	7.8조원 (생보 3.9조원 손보 3.9조원)	3.8조원	600억원
ROE	6%	5.71%(생보) 11.39%(손보)	7.7%	12.2%

\* 2017년말 기준(지문·일임업 당기순이익·ROE·CR3 2017.1-3분기 기준)

수 있는 '메기'를 키우겠다는 의미다.

먼저 진입정책 결정을 민간 위원회로 넘겼다. 지금까지는 외부 참여없이 금융당국의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면서 기존 금융회사가 지대(地代)를 향유하는 '적폐'가 가능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진입정책 의사 결정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객관적, 중립적 시각에서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진입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된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가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쟁도를 평가하고, 신규진입 정책을 결정한다.

업권을 불문하고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자본금요건은 일제히 낮아졌다.

보험업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일반 보험사 자본금의 100분의 1수준인 일본 소액단기보험사를 예로 들었다. 여전히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온라인전문보험사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자본금을 낮춰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화증권사의 경우 투자중개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도 기존 3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5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는 신탁 기능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10억~250억원으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인가과정도 손을 봤다. 그간 비공개였던 인가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공개하고, 쟁점이 발생하면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활용한다.

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인가에 대해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예비인가 후 일

정기간 내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정형화된 인가의 경우 금융위원장 전결 등으로 신속처리토록 한다.

그러나 가장 관심이 컸던 은행업 진입규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20년 만에 내놓은 진입규제 완화인 만큼 은행업이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은 더 크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업의 '만행' 격인 은행업 인가단위 개편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와 관련해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 역시 실제 수요는 거의 없을 것이라 게 금융권 반응이다. 은산분리 법안은 손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은산분리 원칙을 헐어가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현행법 내에서 시장 수요가 있다면 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일문일답

### “인터넷전문은행, 현행법 내 추가진입 적극 검토”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혁신적 참가자의 신규 진입 문턱을 낮춘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훈 금융서비스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안은 뉴플래이어, 기존 영업자, 금융당국 등 3부문의 고리를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규 인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법 하에서 추가 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화신탁회사는 관련 당

국과 세제 혜택을 협의해 유인 동기를 마련한다. 아래는 최 국장과의 일문일답.

—은산분리 완화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은산분리 원칙을 헐어가면서 추진하겠다는 건 아니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추가 인가 과정에 반영하면 되고, 우선은 현행법 내에서 시장 수요가 있고 경쟁도 평가를 거쳐 진입 여력이 있다면 (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런 상황에서 추가 인가해도 되나.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실제로 지적이 나왔는데 통계 기술상의 문제도 있다. 보증부 대출의 경우 추산에서 빠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중금리대출의 비중이 높다고 본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독자적 영역은 나름대로 갖춰가고 있으나 더욱 더 강화해야 이들 은행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정책 결정에서 어떻게 활용하나. 강제성이 있나.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특별위원

회 형태로 운영한다. 그동안 개별사에 대한 인가는 당국 담당자의 재량에 의존해 왔다. 앞으로 평가위에서 산업구조 분석 등을 통해 인가에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인가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다만 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평가위 구성할 때 중요 항목까지 포함해서 공개하겠다.”

—은행업 인가단위 세분화를 미룬 이유는.

“은행법상 은행업 업무가 예금, 기타 유가증권 발행, 대출 등 포괄적으로 돼 있다. 이를 세분화할 경우 인위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뉴플래이어의 장기적 생존 부분을 구체화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은행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두부 모자

르듯 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 부분만 몇 달 동안 깊이 논의했으나 우선 산업 분석, 해외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특화신탁회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후견 신탁 등 뉴플래이어에 세제혜택 등 동기부여 있나.

“우리나라 신탁 시장은 금전 신탁이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부동산이다. 비금전 회사의 신탁 발달이 안 돼 있다. 그러나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재산관리기구로서의 신탁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비금전신탁의 가능성을 확 열어놓는 제도를 마련했다. 신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제 혜택 등은 구체화 단계에서 관련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3월말	12월말	1월말	2월말	3월말
기업대출	0.71	0.47	0.56	0.64	0.56
대기업	0.67	0.46	0.44	0.45	0.45
중소기업	0.72	0.48	0.59	0.69	0.59
가계대출	0.26	0.23	0.25	0.28	0.25
주택담보대출	0.20	0.17	0.18	0.19	0.18
가계신용대출 등	0.43	0.38	0.42	0.49	0.40
원화대출 계	0.51	0.36	0.42	0.48	0.42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

### 3월 은행 대출연체율 0.42%... 하락세로

분기말 연체채권 정리 효과  
전월 말 대비 0.06%p 하락

지난 3월 은행의 대출연체율이 석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2%로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2조1000억원으로 신규연체 발생액 1조2000억원을 웃돌면서 연체채권 잔액이 줄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8%포인트 하락한 0.56%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45%로 전월 수준

을 유지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0.10%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 말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8%,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 대비 각각 0.01%포인트, 0.09%포인트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 중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분기말 연체채권 정리효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다만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해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작년 은행 관계형금융 6조... 41% 증가

전체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의 6배 수준

지난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금융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관계형금융 잔액은 5조92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8% 증가했다. 전체 중소기업대출 증가율(7.4%)의 6배 수준이다. 장기대출(5조8818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분투자(392억원)는 소폭 감소했다.

관계형금융이란 은행과 기업의 장기신

뢰 관계를 통해 장기대출이나 지분투자,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기업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11월에 도입됐다.

전체 중소기업대출 655조4000억원 대비 관계형금융 비중은 0.90%다. 지역밀착형 영업전략이 반영돼 지방은행의 관계형금융 비중이 2.01%로 시중은행(0.96%)의 2배를 웃돌았다.

중소기업업장에서 보면 관계형금융은 3년 이상 장기상품으로 안정적인 장기자금이 될 수 있다. 3년이상 5년미만이 76.9%, 5년이상 10년미만이 14.7%, 10년

이상이 8.4%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3년 미만 대출이 90%가 넘는다.

대출금리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관계형금융의 평균 대출금리는 3.58%로 전체 중소기업대출 평균금리 3.68%보다 낮다.

은행업에서도 일시적인 거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부실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관계형금융 연체율은 0.60%로 전체 중소기업대출(0.48%)과 비교하면 다소 높지만 비계량정보를 활용해 대출을 취급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다. /안상미 기자

### 장외파생상품 거래 1경4000조... 10% ↑

수출경기 회복에 환헤지 수요 증가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가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0개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총 거래규

모(명목금액 기준)는 1경3962조원으로 전년 대비 10.4%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출경기 회복에 따른 환율하락 등으로 환헤지수요가 증가해 통화선도 거래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7947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9.8% 증가했다. 금리변동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이자율스왑 잔액이 주로 늘었다. 기초자산별 거래규모는 통화가 1경1142조원으로 79.8%를 차지했고, 이자율(18.6%)과 주식(1.3%), 신용(0.2%) 등의 순이다.

잔액 기준으로는 이자율이 62.7%를 차지했고, 통화(35.4%), 신용(0.9%) 및 주식(0.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상미 기자